

# 尹 탄핵심판, '2말 3초' 가능성... 탄핵인용 시 '벚꽃대선'

현재, 한덕수·이경민 증인채택 안 해尹 새로 신청한 3명도 가능성 낮아 늦어도 내주 변론 최종 마무리 될 듯 변론기일 종결 여부 입장은 '아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 채택을 보류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탄핵소추안 인용·기각 결정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일 탄핵이 인용될 경우 4월 말이나 5월 초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도 있게 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전날(11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인 한덕수 총리와 이경민 직무대리는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새로 신청한 3명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지만, 채택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배보윤 변호사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스시스

계의 전망이다.

현재는 오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연다. 현재는 추가 변론기일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증인신문은 8차 변론기일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현재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 진술 등을 듣기 위한 별도 기일을 1~2회 정도 추가되지

정한 뒤,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

앞선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신문 이후 5일 내외가 지난 후로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했던 것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주에는 변론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변론기일 종결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는 이날 브리핑에서 변론 종결 가

능성을 알 수 없다고 했고, 향후 변론기일도 미정이다.

현재 속도대로 탄핵심판이 진행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날 것이라는 예측이 다수다. 이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례를 보면 변론 기일이 종료된 뒤 2주 내에 선고했다.

이런 상황이라 정치권에서는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만일 2월 말이나 3월 초에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내 새 정부를 위한 대선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 3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 투표가 이뤄졌다. 파면 이후 움직이면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려운 것이다.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탄핵 반대 입장을 드러내는 국민의힘 소속 대권주자들은 비공식적으로 세 걸집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개헌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40명이 참석했

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선 출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면 모습을 드러낼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으로 보고 있는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뿐 아니라 다른 잠재적 대권주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는데, 사실상 대선 주자로서 청사진을 발표했다라는 평가가 대다수다.

'비명계 3김'으로 통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13일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날 예정이다.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기 전에 내부 결속을 다지고, '이재명 일극체제'라는 비관을 불식시키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뭇 “지자체에 대통령 권한 넘겨 재정권 행사하게 하자”

###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개헌으로 '5대 강소국 프로젝트' 실현 내치 관한 것 초광역지자체에 이양 벤치마킹 케이스로 싱가포르 등 있어

오세훈 서울시장도 12일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실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 평균 10%씩 성장하는 모멘텀(계기)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지방분권 중심의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이번 토론회는 여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손꼽히는 오 시장이 직접 개헌론을 설명하는 자리여서 많은 관심을 모



오세훈 서울시장도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았다. 국민의힘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 등 당 핵심 지도부와 안철수 의원, 김기현 의원 등 당 중진도 다수 참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헌론이 대통령 5년 단임제는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내고 저도 반대하지 않지만, 권한을 더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서 지자체별로 발전 전략을 짜게 하고 재정권(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대통령제의 폐를 막고 의회 폭거를 막을 수 있는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구체적으로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전국을 수도권을 포함해 5개의 광역지자체로 나누고 재정권 등 권한을 대폭 이양해 특색 있

는 지방만의 발전 모델을 수립하고 발전시키도록 하자는 것이다.

오 시장은 "서울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에너지가 수도권으로 쏠리는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전략과 정책을 내서 열정을 갖고 노력해도 지방소멸의 대세를 바꿀 수 없을 것 같다는 걱정과 고민을 바탕에 두고,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싱가포르가 인구가 600만이고 국민 소득이 10만 달러, 구매력까지 하면 12만~13만 달러다. 지금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전북, 충남·충북을 합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광역지자체에 모든 권한을 위임해 실질적 권한을 갖게 하고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권한을 남기고 내치에 관한 것은 광역화된 지자체에 이

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방발전 모델엔 인적 자원과 자금이 필요하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3인데, 과감하게 5대5 혹은 그 이상으로 재정권을 지방에 넘겨주는 것"이라며 "세금을 정하고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쓰는 권한까지 지방에 주고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배분하고 투입하는 권한까지 지자체에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싱가포르, 두바이, 아일랜드가 우리에게 매우 좋은 벤치마킹 케이스"라며 "이들은 인구가 1000만이 되지 않는 조그마한 나라 단위 인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소득이 현재 3만5000불 정도로 정체돼 있는데, 싱가포르 모델 같은 것을 지역별로 채택해서 각자의 방법으로 경쟁 상태에 돌입하면 다시 한번 1980년대에 돌입했던 연 10% 성장 모멘텀을 이 시스템 변화로 만들 수 있다"고 설득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與 “尹 비상계엄, 野 때문” vs 野 “‘명태균 게이트’ 신속 수사”

###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與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가” 野 “尹 부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이 12일 시작된 가운데, 야당은 수사 당국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명태균씨가 각종 의혹으로 얽힌 '명태균 게이트'를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입법 독재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대립 구도를 이어갔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내란이 발생한 12월3일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명태균 사건이다. 이에 대한 수사 보고서가 있다. 대통령실에 수사 보고서가 보고 됐다"

라고 물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는 수사팀에서 관련 내용을 전혀 보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용산에 보고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고서를 보면 별 내용이 다 있다. 대통령과 영부인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어서 수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왜 소환 조사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김 차관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인데, 여론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수사팀이 그 부분은 현재 관련 포렌식을 하는 중이라서 물적 증거 분석이 끝나고 필요하면 여러 소환

조사 등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윤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발언대에 나오자마자 "12·3비상계엄이 내란인가"라고 물었다. 예상했다는 듯 폭소를 터트리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

김 차관은 "그 부분은 내란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예산안 폭주 등 결국 윤석열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12·3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다.

김 차관은 "입법 폭주, 탄핵,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의혹 등 4가지 정도에 대해 대통령이 문제 의식을 가졌다고 공소장에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태홍 기자

## 민주당, 李 제안 '국민소환제' 법안 발의

헌법학계 "도입하려면 개헌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소환제'를 언급한 뒤, 정치권에서 국민소환제가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제안 후 곧바로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소환제는 선거권자들이 투표로 선출직 공직자를 파면·소환할 수 있는 제도인데, 대상이 국회의원일 경우 국민소환제라고 부른다. 그간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은 여러 차례 나왔지만,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김문수·김원익·김윤·문금주·박지원·서미화·안도걸·양부

남·이개호·이원택·정일영·조인철·주철현·허성문 의원이 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의 제안을 시작으로 입법화를 위한 첫 발을 댄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22대 국회 들어 박주민·이광희·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이미 발의한 상황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법학계에서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에서 규정한 대의제, 자유 위임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는 데다 우회적인 신임투표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대표자의 선출과 신임은 선거의 형태로만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서예진 기자